

국힘 2차 경선 투표 첫날 각 후보들 “韓대행과 단일화” “원샷 국민경선”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2차 경선의 당일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27일 시작된 가운데 지지 호소하는 각 후보들이 발언이 이어졌다.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차이를 보였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출마할 경우 단일화를 시도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이 출마한다면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로서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경선에서 반드시 1위 차지해 대한민국을 지키는 송고한 사명을 지켜 나가겠다”며 “(후보로) 결정되면 이재명을 이기려는 모든 세력과 손을 잡고 힘을 모아 6월 3일 대선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 하는 모든 후보와 사심 없는 단일화가 잡을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못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라고 자신을 표현하면서, 단일화 주도권 쥐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안철수 후보도 한 대행 출마에는 반대

김문수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 주장”

안철수·홍준표 “韓 출마하면 경선으로 후보 뽑아야”

한동훈 “결국 당에서 선출한 후보가 이재명과 싸울 것”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단일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한 대행이 출마한다면 우리 당 후보와 함께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 대결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정말 정확한 방법으로 (최종 후보를) 뽑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객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 후보와) 1대 1로 대결하는 구도이지 않겠나. 그 사람의 경쟁력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보다 이 후보 대 한 대행, 이 후보 대 우리 후보의 일대일 대결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경선 방식처럼 당일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당 경선 후보들의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 후보와의 일대일 조사를 통해 적합한 대선 후보를 찾는 취지다. 또한 한 대행에게 입당을 권하기도 했다.

홍준표 후보 역시 경선을 통한 단일화 방식에는 안 후보와 뜻을 같이했다.

홍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종 후보가 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단일화 토론을 두 번 하고 원샷 국민경선을 하겠다”며 “그게 이재명 후보를 잡을 수 있는 길이라면 흔쾌히 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내가 우리 당 대통령 후보가 못 되더라도 이재명만 잡을 수 있다면 흔쾌히 그 길을 택하겠다”며 “오늘 투표와 여론조사에 꼭 준비된 대통령 홍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했다.

한동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바로 오늘이다. 이기는 선택, 저 한동훈을 선택해 달라. 오늘 경선 투표에서 드라마를 만들어 주면 저 한동훈이 이재명 민주당을 이기겠다”고 했다.

앞서 한 후보도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과 함께 할 것”이라며 한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전날 토론에서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정말 이기고 싶어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 같은데 그것 자



26일 서울 중구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2차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철수,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후보.

태가 역동성이라고 생각한다”며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선출하는 후보가 이재명과 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이 이르면 오는 30일 사퇴 후 출마 여부를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일이 다음달 3일이고, 공직자 사퇴 시한이 4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뉴스

다시 불붙는 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 정부는 ‘신중론’ 계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대표 정책인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놓고 정치권이 다시 불붙고 있다.

정부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해 민주당이 압박에 나서고, 다른 대선 주자들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신중한 모습을 고수하고 있다.

2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 회의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그간 추진해온 민생회복지원금이 다시 거론됐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후보의 역점 정책으로 당대표 시절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관련 법안이 폐기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행안위서 ‘지역사랑상품권’ 민생회복지원금 다시 거론

거부권으로 폐기돼 민주당 추경 요구했으나 반영 안돼

민주당 “적극 검토해야”… 정부 “필수 수요만 반영” 부정적

국힘 등 대선 주자들도 비판 수위… “현금살포 포퓰리즘”

이에 민주당과 진보 정당은 이번 추경안 편성을 앞두고 정부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편성을 요구했으나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 미국발 통상 리스크 대응,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에 조정을 맞춘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와 관련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행안위에서 “경제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 꼭 들어갔어야 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파면은 땀

지만 여전히 내란수괴 윤석열 정부 시절의 긴축 재정 기조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저는 결국 정권이 바뀌면 민생회복지원금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과거에 예산을 편성할 때 행안부가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떠나) 윤석열 정부를 넘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총 13~18조원에 달하는 재정 지출 규모에 비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크지 않고,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

하다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에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추경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나”는 위성근·박정현 민주당 의원 질의에 “재정 당국에서 필수 추경으로 필수 수요만 반영하다보니 그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행안부 업무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열심히 안 한다는 반증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가 지역화폐라는 것은 인정하느냐”고 물었지만 고 직무대행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고 직무대행은 “(추경안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편성 요구가 있을 경우 행안부에서는 동의할거나 용 의원 질의에도 “이번 추경은 필수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며 “아마 그런 취지가

종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5일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과 관련해 “일률적, 일시적 현금 지급의 경제 효과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그는 또 지난 26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에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게 임하겠다”며 사실상 전국민 25만원 지원에 선을 그었다.

다만 민주당은 기존의 요구에서 한발 물러나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20조원에 대해 중앙정부가 10%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2조원 규모의 예산을 이번 추경심사 과정에서 반영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정부가 지역화폐에 2조원을 지원하면 20조원에 이르는 소비를 유발해 내수 경기 진작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을 비롯해 다른 대선 주자들도 이 후보의 전국민 25만원 지원에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이 후보는 예산 편성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권력 기능을 사실상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려고 한다”며 “전국민 25만원 현금 살포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마구 내던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도 “이재명의 25만원, 현금 ‘살포·포퓰리즘’”이라고 했다. 현금 살포와 표심을 얻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취한다는 의미로 이를 섞어 ‘포퓰리즘’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지금 정치가 나서서 돈이나 나눠주면서 ‘25만원을 주자’, ‘상품권 뿌리자’ 할 때 절대 아니다”라고 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남의 돈으로 생색내는 흔한 정치인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민 25만원 지원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만큼 정부의 고심도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대선 이후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는 ‘포스트 대선 추경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뉴스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주최 **장성군** / 주관 **장성군축제위원회**

제24회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

2025. 5. 10. (토) - 5. 11. (일) 장성 황룡강변

전야제 5. 9. (금) / 뮤직 페스티벌 5. 10. (토) / 나들이 5. 12. (월) - 5. 18. (일)